

2021년 강화군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강화군에서 2017. 1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2021.9.6.~9.17까지 10일간 3개반 18명이 참여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83건(본처분 57건, 현지처분 2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췌한 수범사례 11건은 대내·외에 공개하여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분	처분현황(건)			처 분 요 구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추징 환수	환급 감액
계	98	72	26	98	47	41	10	14/ 728,221	12/ 262,221	2/ 466,000

2021년 강화군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직위해제자 복직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의 각 호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직위를 해제하였을 경우 복직처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 확정시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당연 소멸됨으로 사후 행정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1심 또는 2심 판결 후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 계속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구속이 해제되거나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강화군 ○○과는 20**.**.*.일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상황을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직위해제) 각 호(1~4)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제공/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4. 공무원으로서 품의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통보 [◇◇지검 기소 의견 송치(****형제****)]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당시 가과 소속 지방●●사무관 A(가과장)와 나과 소속 지방○○주사 B(◆◆담당)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직위해제)제1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20**.**.*.일자로 그 직위를 해제하였고,

곧이어 20**.**.*.일자 자체 내부검토를 통해 ‘가과장 부재로 인한 업무대리자(주무담당)의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와 부서의 현안업무 추진 및 관리, 나과 ◆◆팀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대응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직위해제자의 복직을 추진키로 하고 향후 검찰의 기소결정 통보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직위해제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20**.**.*.일자로 이들에 대한 복직을 명하였다.

그러나, 당초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4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한 A와 B에 대하여 복직을 결정한 시기는 해당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직위해제 결정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복직여부 판단의 여지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지속했어야 함에도 강화군 ○○과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복직처분을 이행하였다.

더군다나 복직 처분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일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통보되자 20**.**.*.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재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으로써 강화군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인사행정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정·현원 직렬 불부합 인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제1항에 따라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2항의 각 호 [1.직위의 직무요건(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직렬 및 직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보유 역량의 수준, 경력·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고,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제1항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중 강화군의 공무원 전보현황을 확인한 결과 가과 정원인 ○○직렬 A는 20**.**.일자 나과(다과)로 전보임용되어 20**.**.까지 라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는 마과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방@@주사 B는 20**.**.*.부터 20**.**.*.까지 바과에서 ◆◆팀 업무총괄을 20**.**.*.부터 현재까지는 아과 ■■팀 업무총괄을 각각 담당하였으며, 지방◇◇주사 C는 ●●면에서 20**.**.*.부터 현재까지 직렬과 관계없는 ▷▷총괄을 담당하는 등 다수의 부서(기관)에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과 불부합하는 전보인사가 시행되었다.

강화군 ○○과는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과 부합하지 않는 직렬을 임의부서(기관)에 전보임용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직렬별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강화군 부서별(기관별) 정원에 부합하는 전보임용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분기별 교육훈련 실적 점검 미이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동일교육 훈련실적과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한 재교육, 그리고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등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장은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 소속 직원의 교육실적을 종합관리하고,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분기별 시행하여 오류 또는 부정으로 입력한 경우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강화군 ○○과는 ‘20**년도 *분기 상시학습 실적 관리 협조 요청’, ‘20**년 *분기 상시학습 충족여부 현황 안내 및 실적 관리 협조 요청’, ‘20**년 *분기 상시학습 충족여부 현황 안내 및 실적 관리 협조 요청’ 등 3회에 걸쳐 연간 상시학습 시간

충족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부서(기관)으로 발송하였으나, 감사기간인 2017. 12월부터 2021.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대하여 점검을 이행한 사실은 없다.

교육훈련부서로서 소속 공무원의 교육수료 독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오류입력 사항 확인·수정, 부적정한 사례 시정조치 등 교육훈련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실적을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2. 상시학습 미충족자 승진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교육훈련 부서는 승진임용 등의 경우에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대상 기간 중 강화군의 승진의결자의 상시학습 실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강화군 ○○과는 행정*급 A 등 3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동일과정 수료 또는 중복 입력된 실적을 제외하지 않고 상시학습 충족자로 인정하여 각 승진의결일 기준 승진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해당 중복승인 실적을 제외할 경우 상시학습 필요시간을 미충족하여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 모두 승진의결 되는 등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부적정한 교육훈련 실적관리로 인해 강화군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분기별 실적점검을 이행하시고
향후 교육실적 오류·중복 입력 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
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7개 부서

내 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절차)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

2017.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화군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가과 등 6개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2019. 7월 이후에도 응시원서(이력서)에 사진 부착, 학교명·학과·학위 기재 등 평가에 편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하였고

업무 분야별 채용기준을 ‘강화군(청) 또는 특정부서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 ‘기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는 예비 근로자의 근로권한과 채용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채용기준 임의변경 및 심사단계별 평가 부적정

1) 동일분야 채용기준 임의변경

강화군 가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00회의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0회에 걸쳐서는 ‘강화군(청)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를 채용기준으로 공고하였으나 20**년 *월(20**-****)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아 20**.*.~20**.*.까지 가과에 근무했던 A(*****)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고, 20**년 *월(20**-****)에는 ‘강화군청 가과에 기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로 경력을 제한하여 20**.*.~20**.*.까지 나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B(*****)을 채용하는 등 동일 직무분야에 대하여 임의로 채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였다.

2) 서류전형 평가항목 부적정

강화군 다과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업무관련 및 유사경력’에 대하여 20**-****, 20**-**, 20**-****의 3회는 경력이 많을수록 최고배점을 부여하였고 그 외 3회는 경력이 낮을수록 배점을 높이는 등 동일분야, 동일자격의 기간제 채용에 대하여 부서 임의로 배점을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를 위한 응시자 경력의 객관적 검증(경력 증명서 확인 등)도 이행하지 않아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3) 면접시험 평가항목 부적정

강화군 라과는 2019년 ‘ㄷ 청사관리’와 ‘ㄹ 사무보조’ 기간제 채용 면접시험에서 정량평가 대상인 특수이력(자원봉사 실적)을 경력 검증 없이 면접심사 항목으로 배치하였고, ‘ㄷ 청사관리’ 분야 채용기준을 ‘강화군(청)에 기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로 공고하였음에도 면접시험 평가항목에 ‘강화군 근무이력’을 포함하여 공고

기준상 부적격자인 강화군 근무 이력자에게도 1점을 부여하는 등 면접시험을 부적절하게 운영하였다.

아울러 다과, 나과, 라과의 각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심사표에도 직무수행과 무관한 ‘용모’, ‘주소지와 사무실까지의 거리’, ‘개인 사생활(휴일에 주로 하는일, 취미, 특기)’ 등의 부적절한 사항을 면접평가(질의) 항목에 배치하여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였다.

3. 면접시험 미이행 및 면접위원 심사 부적정

강화군 나과 ○◇팀은 20**년 *월(20**-**)과 **월(20**-**) ‘ㄱ 조사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시, 마과는 20**년 *월(20**-**), *월(20**-**), *월(20**-**) ‘ㄴ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시에 각각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면접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서류전형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강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채용기준을 위반하였다.

가과는 20**년 *월(20**-**) ○□팀과 ○Ⓜ팀 사무보조 각 1명씩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시험 응시자 3명에 대하여 당시 가과장 A, ○□팀장 B, ○Ⓜ 팀장 C은 면접심사를 시행하면서 워드프로세서로 점수가 책정되어 있는 응시자별 평가표에 3명이 일괄 서명(날인)하였고, □ㄷ팀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20**-**)에서도 면접위원이었던 가과장 C과 □ㄷ담당 B가 위와 동일하게 시행하였으며, 20**년 *월(20**-**) ▷▶팀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팀장 B, ▷▶팀장 D, ◎◎팀장 C 등 3명이 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응시자 0명에 대하여 심사위원 각각 개별 평가는 하였으나 그 중 ▷▶팀장 D은 0명의 심사표 모두 날인을 누락하였다.

바과는 20**년 *월(20**-**) ‘ㄹ 안전경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정량 평가 대상인 ‘취업 경력, 최근 직무의 특징 및 유사 경비관련 근무경력 여부’를 면접 평정표의 적합성 평가 항목에 상(10~8), 중(7~4), 하(3~1)로 차등 배치하여 평가하였다.

더구나 해당 항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경력증명서 확인 등 사전 검증을 이행하지 않고 응시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면접위원인 ■■팀장 E, ⊕⊕팀장 F, ◎◆팀장 G 등 3명은 면접시험 응시자의 동일

경력에 대하여 상이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면접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채용서류 관리소홀

강화군 다과에서 추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다과는 20**. *월(20**-****), *월(20**-****)과 *월(20**-****) 등 3차례에 시행한 ‘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자료를 요구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재차 확인한 결과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던 중 감사종료일(9.17.)에 *월(20**-****) 채용서류를 제출하였고 2건의 관련 자료는 최종 분실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방○○주사보 H는 20**.*.*.부터 *.*.*.까지 다과 기간제 근로자 실무담당자로, 지방◆◆주사 I는 20**.*.*.부터 20**.*.*.까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응시자격 부적격자 선정

지방■■주사보 J는 20**.*.*.부터 현재까지 가과 기간제근로자 실무담당자로, 지방△△주사 K는 20**.*.*.부터 20**.*.*.까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년 **월(20**-****) **팀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강화군(청)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20**.*.*.~*.*.*.까지 가과에서 근무했던 L(*****)을 서류전형 시 배제하지 않고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지방○○주사보 M은 20**.*.*.~20**.*.*.까지 지방◇◇주사보 N은 20**.*.*.~20**.*.*.까지 나과 기간제근로자 실무담당자로, 지방○○주사 O는 20**.*.*.~현재까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년 **월(20**-****) ‘ㄱ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강화군(청)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도 사실 근무이력이 있는 P(*****)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20**년 *월(20**-****)에도 동일한 기준 하에 나과에서 기 채용했던 P(*****)를 다시 채용하였다.

또한, 지방□□주사보 Q는 20**.*.*.~20**.*.*.까지 라과 기간제근로자 실무담당자로 지방○○주사 R는 20**.*.*.~20**.*.*.까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년 *월(20**-****), *월(20**-****) 각각 ‘ㄷ 청소관리’와 ‘사무보조’ 채용 시 ‘강화군

(청)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아과 차과에 근무이력이 있는 S(*****)과 T(*****)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다.

지방○○주사보 U은 20**.*.*.~20**.*.*.까지 차과 기간제근로자 실무담당자로 지방▷▷주사 V은 20**.*.*.~20**.*.*.까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년 '□□마을 ○○○○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력인 '◇◇■ ■■ 분야 및 ◇◇◇○○ 분야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채용기준을 명시하여 공고하였다.

그러나 차과는 경력증명서를 통한 응시자의 객관적인 경력 검증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경력이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강화군은 각 부서에서 공고한 채용기준에 적격하지 않은 대상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분야별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고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각 시험전형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강화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의 표준양식을 전파하는 등 공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취득세(건축물)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임시건축물의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신·증축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면 가리 ***-*번지 등 0개소의 취득세 등 00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나면 나리 ***-*번지 등 00개소의 취득세 등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취득세(시설물)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급수·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한다. 또한 「지하수법」 제7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의3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지하수(생활용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 급배수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2018년~2021년도 건축물(시설물) 취득세 00건,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3. 취득세(지목변경)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2항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 □리 **~**번지 A 등 0인에 대하여 관련 취득세 등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세(재산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주민세 “재산분”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 1.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7. 31.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A) 등 00개 사업장에 대한 2018년~2020년 주민세 재산분 00건,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주민세 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재산세(토지분)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3종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등이 해당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포함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제1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유지(溜池)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을 말하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규정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펜션 부속토지, 캠핑장, 농지 미사용 잡종지 토지

등에 대하여 향측사진, 건축허가대장 및 현지출장 확인을 통해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고,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임야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ㄱ면 ㄴ리 *****번지 토지 등에 대하여 2017년~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00건,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재산세(건물분) 부과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년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38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배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매년 과세기준일까지 멸실,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현황이 변동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한 후 세액을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ㄷ면 ㄹ리 ***-**번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2017년~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0건,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재산세 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착수·완료 신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현상변경 행위 시 착수·완료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허가사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²⁾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신고사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법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제3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법 제103조(과태료)제3항 및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정장은 현상변경 허가 착수 및 완료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³⁾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문화재청예규) 제17조(착수 및 완료신고)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제16조(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허가 사항을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하되,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아울러, 규정 제21조(과태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 제17조제1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도 각 시·도를 통해 군·구로 공문⁴⁾을 시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현상변경 착수·완료보고를 누락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민원인들의 착수·완료신고 또한 적기에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따라서, 강화군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경우 기한 내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사.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제3항)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4)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착수·완료 보고 철저 요청 공문

- 현상변경 허가 착수·완료 보고 철저 요청(문화재청 보존정책과-6293호, 2019.10.16.)

- 현상변경 절차 준수 요청(인허가 간주제 및 착수·완료 보고)(문화재청 보존정책과-3998호, 2020.7.6.)

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포함하여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번 감사기간 중 문화재청 주관으로 20**년, 20**년 강화군에서 실시한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 대상 허가 건(20**년, 20**년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년 현상변경 허가 00건 중 00건은 착수신고를 00건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년은 00건 중 00건은 착수신고를, 00건은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현상변경 허가 착수·완료 미신고 0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 방안을 마련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행위 착수·완료 신고가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문화재수리보고서 접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감사일 현재까지 ‘ㄱ정비공사’ 등 총 00건의 문화재 수리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하였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문화재수리보고서의 작성)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⁵⁾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이하 “수리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46조(시정명령 등)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각 호에 따른 사유

법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문화재 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I.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시행청은 문화재수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수리보고서 납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리보고서에는 수리공사에 참여한 모든 인력(감독관, 관계전문과, 기술자, 기능자, 보통인부 등)의 이름과 자격, 참여 공정 및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공사내역에 수리보고서 발간비용을 반영하되 발간된 수리보고서는 도서 및 전자책(e-Book, PDF파일) 수록 CD를 문화재청(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업로드, 관련부서, 문화재청 기록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에는 2019. 2월부터 문화재수리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수리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4.8.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각 시·도를 통해 군·구로 시달하면서 ‘수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리(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발주자(군·구 감독관)의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승인만으로도 문화재청으로 자동 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리고 수리(감리)보고서 등의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강화군에서도 이 문서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문화재수리 공사를 발주한 경우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수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수리보고서에 수리대상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또는 인천시장에게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승인·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관청(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⁶⁾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강화군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수리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및 시행규칙 제5조(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에 따라 강화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인천광역시시장에 이를 제출하여 수리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금번 감사기간 중 2018년~감사일 현재까지 준공된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수리공사 총 00건에 대해 문화재수리보고서 접수 및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식회사와 계약한 ‘ㄴ 정비공사’의 경우 20**.*.**,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년 *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수리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는 등 [표]와 같이 00건의 문화재수리 공사에 대한 수리보고서를 공사 준공일로부터 짧게는 *개월에서 길게는 *년 *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ㄷ 보수정비 공사’ 등 00건의 공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수리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문서시스템으로 접수하지 아니하여 수리보고서 제출일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문화재청장 및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강화 ㄹ(◇◇◇◇및 ▷▷▷▷) 및 ㅍ 보수정비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서에 수리보고서 발간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수리보고서 작성비 00천원을 집행하였음에도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전반을 기록화하여 차기 또는 유사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에 활용하고자 한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제출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문화재청장 및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리보고서를 조속히 접수·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수리보고서 접수·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개선요구

제 목 ㄱ·ㄴ·ㄷ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 행정재산인 ㄱ·ㄴ·ㄷ시설을 강화군 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위·수탁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⁷⁾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 ②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행정재산 관리 위탁)에는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는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ㄱ·ㄴ·ㄷ시설을 강화군 가공단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기·리·리시설을 계약기간 정함 없이 최초 위탁일부터 해지시까지로 하여 강화군 가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위탁일부터 최대 00년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갱신 및 평가 절차 없이 강화군 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2. 위탁재산 및 사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및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수탁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지도·점검 등)에도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또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ㄱ·ㄴ·ㄷ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 및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뿐 만 아니라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위탁재산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위탁재산 및 사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법·부당한 내용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ㄱ·ㄴ·ㄷ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탁재산 및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수탁자로부터 위탁재산에 대한 연간관리상황을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에 따르면 공단이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공단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단이 그 대행사업을 종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강화군 가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는 강화군 가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의 정산은 사업 종료 후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이전(307목)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정산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ㄱ·ㄴ·ㄷ시설을 지방공기업인 강화군 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가공단으로부터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받은 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검사) 및 제24조(감독)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위탁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공단에 위탁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감사일 현재 가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 일체를 사업별 구분 없이 ◇◇과에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으로 일괄·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위탁사업별 소요예산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위탁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법령 및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예산편성부서인 ◇◇과의 소관 업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과 지정)에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업무주관과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분장사무)에도 ㄱ·ㄴ·ㄷ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주관부서인 ○○과 및 □□과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예산이 ◇◇과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ㄱ·ㄴ·ㄷ시설 위탁에 따른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정산 및 지도·점검에 대한 업무는 업무주관부서인 ○○과 및 □□과 소관 업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탁사업비가 ◇◇과에 일괄 편성·집행하고 있어 위탁사업비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의 개정(2013.6.21., 2015.7.20.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 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과)에서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과)에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 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이 경과한 ㄱ·ㄴ·ㄷ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 후 갱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재산·사무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 시 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가공단 위탁사업비 편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강화군에서는 감사일 현재 총 00개 시설 및 사업을 강화군 가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 일체를 사업별 구별 없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으로 ○○과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에 따르면 공단이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단이 그 대행사업을 종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 가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따르면 강화군 가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 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의 정산은 사업 종료 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⁸⁾에 따르면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 대행

8)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2. 독립재산의 원칙 2-3.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

에 따른 예산편성은 위탁대행 사업비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 수입에 계상하고 위탁대행 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 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화군 가공단에 시설 및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대행 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로 편성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정산검사) 및 제24조(감독)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대행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공단에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강화군 가공단에서는 위탁대행 사업비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 수입에 계상하고, 위탁대행 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 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비용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가공단 위탁사업 중 ㄱ·ㄴ·ㄷ시설 위탁사업비를 확인한 결과, 사업별로 위탁사업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비로 편성·집행한 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탁사업비 일체를 사업별 구별 없이 일괄 편성하여 위탁사업별 소요예산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위탁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법령 및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ㄱ·ㄴ·ㄷ시설 업무주관부서인 □□과 및 ◇◇과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탁사업비가 ○○과에 일괄 편성·집행하고 있어 위탁사업비 정산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과에서도 위탁사업비는 당초 위탁사업비를 근거로 매년 인건비 상승률, 소규모 시설 수선비 등을 반영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서단위 위탁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권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공단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촉) 및 제5조(단원의 구분)에 따르면 ㄱ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 및 일반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ㄱ의 단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원은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되, 전문단원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말하고 일반단원은 전문단원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조례에 근거 없이 일반단원을 수석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여 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석단원의 경우 연습 1회당 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일반단원은 분기별 00원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에서는 수석단원은 ㄱ 지휘자가 단원 중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고 자체오디션(서류 및 실기)을 통해 파트별로 1인 이상 선발하고 있으며, 주 1회 연습 및 수시 공연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감사 기간 중 제출하였다.

그러나, 조례 제6조(전형위원회) 및 제7조(전형방법)에 따라 모든 ㄱ 단원은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포함한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에서 선발·위촉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단원도 수석단원과 같이 주 1회 연습 및 수시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등 모든 단원의 선발방법은 조례에 따라 동일하며 그 활동사항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조례에 근거 없이 ㄱ를 일반단원 외 수석단원을 별도로 구성, 차등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ㄱ 운영을 위해 일반단원 외 수석단원의 별도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ㄱ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조례 제4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군수는 ㄱ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의 선발 및 보충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실비 보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연계획)에 따르면 ㄱ단장은 ㄱ의 공연 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 제12조(공연)에 따라 ㄱ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매년 정기공연 등 공연계획을 포함한 ㄱ 기본 운영계획 수립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20**. **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년 ㄱ 기본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받았으나, 군수에게 기본운영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년, 20**년, 20**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ㄱ 단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조례 제10조(운영지원 등)에 따르면 군수는 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3조(운영경비)에는 군수가 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원의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4조(운영위원회)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 단복 및 체피복비
2. 정기공연에 필요한 경비
3. 다음 각 호의 경우 실비보상

가. 지휘자 및 반자자의 지휘 및 지도비

나. 각종 공연 및 특별활동시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 대한 활동비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강화군에서는 ㄱ 단원의 활동비 등 보상금은 운영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없이 ㄱ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년에는 각각 전문단원 월 00원, 일반단원 분기 00원의 보상금을 상향·조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ㄱ 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및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인권보호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1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 제2항 1호~3호의 요건(3개 이내의 시설일 것,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모두 정원 20명 미만인 거주시설이거나, 군수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모두가 거주시설이 아닐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시설장의 친인척, 법인의 임원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 하는 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만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2 관련 [별표4]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청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현황 확인결과, 가 등 사회복지시설 0개소에서 시설운영 구성 위원수 및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의 위촉 등 관련규정의 기준과 다르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나 외 0개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등 시설 운영위원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강화군청(○○과,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을 임명·위촉하시기 바라며, 시설 운영위원회가 정기(분기별), 수시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군수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등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 사무를 [별표1]에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회계(보조금, 후원금) 등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비지정후원금)중 간접비 사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
되,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며, 간접비 사용비율이 당해연도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년도별 강화군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 확인결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00개소의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비율이 당해연도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되었다.

2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산
보고서 제출(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군과 법인,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
한 것으로 갈음하며, 만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를 근거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바, 군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후
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
후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이하.
보고서로 표기)·공개] 현황 확인결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0개소에서
결산서 제출 시 보고서를 미제출하였고, 이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한 사항이 감사일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히, 0개소(사회복지법인 가, 나, 다)의 경우,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단 한 차례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강화군청 ○○과에서는 전년도 미보고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0개소에서는 보고서 제출 기준일로부터 10일~264일이 초과된 시점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법인 및 시설 00개소에서는 20**년~20**년도에 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관련부서인 □□과에서 이를 검토·승인해야 함에도 승인하지 않았으며,

강화군청(○○과,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00개소의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함에도, 66일~1,237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승인 처리함에 따라, 승인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 되는 시점 또한 지연되거나, 미공개 되는 등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공개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라의 경우, 센터로부터 2018년~2021년 1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감사기간인 20**.**.**과 20**.**.**에서야 4년간의 보고서를 일괄 승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시정] 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미제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시고,
- ② 향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출금의 반납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명기된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2월말)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내역 확인결과, 가 등 0개소, 00명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지출된 퇴직적립금 00원이 반납되지 않고 시설 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며, 나 등 0개소, 00명의 퇴직적립금을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당해연도 내(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반납금을 여입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한을 훨씬 초과하여 뒤늦게 반납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저해되었음에도 강화군 ○○과, □□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보조금에서 지출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00원을 환수조치하시고, 향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의 반납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7조 제1항 2호에 따라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이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라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관리를 위해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및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70일전에 행복e음에서 대상자를 확인 추출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을 대상자에게 안내토록 하고 있다.

만일 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으로 변동되고, 이는 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으로 하여 상담,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혹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제출하였거나 만료 30일미만~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였으나,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 미완료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을 연장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00명에게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지연 통보하였고, 만료예정자의 재판정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이 17일~578일 이후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초과하였음에도 “근로능력 있음”으로 변동처리 하지 않고 37일~558일을 초과하여 재판정 처리하는 등 유효기간 만료예정 근로능력판정 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만일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을 압류하며, 만일,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등 같은 법 제106조에 해당될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천재지변, 화재, 부도, 파산, 면책 등 재산의 멸실이 있어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의 기초생활 보장비용(생계·주거급여) 징수 관리현황 확인결과,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00건, 징수결정액 00원 중 00원이 미징수 되었으며, 보장비용 징수를 위해 미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해야 함에도 독촉고지를 하지 않거나, 납부통지일로부터 282~1,152일이 지난 이후 독촉고지를 하였고, 독촉이후 지정기한 내 징수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를 해야 하나, 체납처분 절차 진행 없이 납부일로부터 상당기간(321~1,235일)이 경과한 대상자 중 일부에게 독촉고지만 재차 하는 등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업무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고,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단기간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건제시유예자로 적용하도록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외국인 수급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시험준비생, 실업급여 수급자, 20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기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검정고시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에 해당되며, 「자활사업 안내」에서 각 대상자별 세부기준 및 제출(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지침을 근거로 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통해 조건제시유예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로 결정하는 자, 그 첫 번째는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로,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단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1회 최대 3개월, 연2회 까지 제시유예자로 선정가능하나,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하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치료(예상)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세 번째는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는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고, 위 세가지 기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을 「자활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A 등 00명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함에 있어 치료(예상)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심사 시점의 진단결과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가 아닌, 과거의 진단이력이 기록된 진단서를 재발급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사실확인조사서를 작성하거나, 사실확인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① 보장비용 징수결정액 중 미징수된 00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고,

[주의] ②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예정통보 기한준수 및 유효기간 초과자 변동관리 등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조건제시유예 기준 조사시점에 진단·확인됨을 증빙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제출서류 및 사실확인조사서를 토대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해 조건제시유예자가 선정되도록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④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되, 7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고,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5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제6항을 근거로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23조 제7항을 근거로 재산조회, 압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만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체납액에 상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군청 ○○과에서는 0건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징수관리 하면서 총 부당이득금 00원 중 00원을 징수, 징수율이 4.6%에 그치고 있으며, 0건 중 0건은 납부통지일로부터 80일~295일(**.*.* 기준)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부과금액 00원 중 징수된 금액이 전혀 없다.

또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0건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실태조사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처분 절차 이행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체납고지서만 의례적으로 발부하는 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 등 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청구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대상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청 ○○과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후 1·2차 모두 기준일을 초과하여 사후점검을 하거나, 감사자료 제출 요구 시점인 2021. 7월에 긴급하게 추가로 점검(지급일로부터 최장 1,526일 경과 후 점검)을 하였으며, 00건 중 0건은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수급권자가 전출 또는 사망사유 발생 전까지 한 차례도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① 정해진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0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 권고

제 목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적정하게 접수·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1. 후원금 지양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및 맞벌이 가정에 속하는 일반아동 외에 총 정원의 6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 다문화가정, 돌봄특례 아동 등 돌봄 취약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고, 이용아동으로부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아동에 한해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월 5만원 한도 내에 수납가능하며, 수납 시 반드시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원금 관리분야의 ‘후원 제한’사항으로 이용아동의 60% 이상이 돌봄 취약아동인 만큼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00개소의 이용아동 및 후원금 모금현황 확인결과, 가 등 00개소에서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이용아동 보호자 00명으로부터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중 총 00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며, 일부 후원자는 00천원, 00천원, 00천원을 일시금으로 후원하였고, 상당수의 후원자들은 월 00천원부터 00천원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20**년부터 20**년 *월까지 후원자 개인이 최대 00천원을 후원하는 등 이용아동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현황을 담당부서인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아동센터 후원제한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군청 ○○과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상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 모금 불가규정이 없어 행정·재정상 조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이용료 무료 원칙’과 ‘후원 제한’사항은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거의 목적과 센터 이용대상의 60% 이상이 돌봄 취약 아동임을 종합하여 기준한 사항(2014~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참조)임을 적극 고려할 때,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이 센터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된 ‘후원금(물품)의 가급적 지양’ 사항이 준수되도록 후원금 제한사항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등 관리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 제8조, 제41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 공개와 더불어 그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입금 및 지출내역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입·지출 결의서를 출력 보관하는 등 의무적 활용을 규정하였으며, 지출처리 중 과오납된 수입금 반환 시에도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입한 세입에 반환 처리토록 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주요기능별로 구분하여 일반 회계관리, 예산관리, 급여관리, 자산관리 등은 통합회계관리로, 후원자 및 후원금 관리(수입 사용 내역관리 및 공시 등)는 통합고객관리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함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 제출(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4월 20일)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만일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를 근거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년도별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후원금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예산의 정확한 집행관리를 위해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수입·지출 일부가 미결의 되었으며, 실제 관리되고 있는 후원금 통장의 수입·사용내역이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에 누락·중복되어 작성되는 등 자료제출의 명확성이 저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렇게 누락된 자료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었음에도 강화군에서는 제출자료의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 처리함에 따라, 해당자료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공시 메뉴얼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었다.

또한, 제출된 보고자료의 승인에 있어서도 지연 승인함에 따라, 승인과 동시에 공개되는 보고서 공개시점(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도 지연되는 등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공개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군청 ○○과에서는 수감기간인 2018~2020년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후원금 분야에 있어서 이월예산 편성에 대한 운영위원회 미보고, 용도 외 사용, 후원금 수입명세서 및 입출금내역 누락 등에 대해 시정·주의, 환수 등 조치를 취하였고, 특히 20**년 지도점검 결과 시설 종사자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미숙’ 등으로 전년도 이월금 처리 등 후원금 수입·지출·공개 처리에 소홀한 점을 확인하여 누락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개선명령을 조치하는 등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군청의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미비 등의 사유로 후원금 수입명세서 누락, 수입·사용결과보고의 부적정 사례가 지도점검 시 조치된 시설 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특히 20**년 지도점검 이후인 20**년에 제출된 20**년 보고서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동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후원금 등 회계분야의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후원 활용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설정 등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설 종사자 교육은 물론,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하시고,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제출되는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승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되도록 후원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60% 이상이 돌봄취약 아동이며, 이러한 돌봄
필요아동에게 보호·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임을
숙지하시어, 이용아동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 모금이 지양되도록 하시고,
② 특히,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 상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 가급적 지양을 명시하고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년 9월 1일부터 전년 8월 30일(1년간)까지의 농지이용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목록은 토지 대장전산정보자료 및 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불법 임대·사용대 등 투기 목적의 취득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 농지원부 및 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중점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타 시군 및

타 시도 거주자 명의의 소유농지는 전부 실태조사 목록에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중점조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3항 관련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의거 관리기관장은 연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20**년, 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20**년 처분대상 00건 중 00건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발송한 후 1년 이내에 농지처분명령의 유예결정, 처분명령(이행여부조사, 처분명령서 송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20**년도 00건만 처분의무통지를 하였고, 20**년에도 처분대상 00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년 농지원부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 정비대상 00건 중 정비실적은 00건으로 전체 정비율은 61%로 정비 실적이 낮고, 임대수탁자에 안내문 발송율 또한 44%로 현행화 업무 추진이 매우 미진(가읍, 나면, 다면, 라면, 마면, 바면, 사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조사인력 채용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인건비(국비100%) 00원 중 00원을 집행, 전체 예산의 55%인 00원을 미집행 함으로써 국비를 반납하는 등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지원부 현행화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를 준수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농지 누락방지, 조사결과 보고, 처분대상 농지 결정 및 처분, 농지원부 현행화(정비)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수의 관리업무 및 가축질병 예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관련 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동물의 진료,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건강진단,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의사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공수의사 자격에 관한사항,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촉에 관한사항, 공수의 업무부여, 공수의 업무추진결과 보고 등을 규정 하고 있다.

강화군 ○○과에서는 2017년~2020까지 매년 공수의 운영계획을 수립, 가축 전염병예방·확산 방지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하여 공수의 위촉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수의 선정시 일부 동물병원에만 위촉관련 희망여부를 파악하였고, 공수의 선정을 위한 운영회의 또한 상기와 같이 진행하여, 공수의 위촉시 일부 동물병원에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아울러 20**년 공수의사 위촉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공수의사로 위촉된 자에게 유리한 위촉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신규 공수의사로 위촉받고 싶은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많아 현재의 위촉심사 기준의 보완·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년 1회 이상 공수의사별 업무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수의 관리업무(위·해촉)에 활용하는 등 가축질병 예찰 활동의 질적 향상과 공적업무의 공정성을 기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방지 및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수의사법」 제22조에 따라 매월 공수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수의사가 제출하는 공수의사 업무보고서, 농가별 진료 및 예찰실적만을 근거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총 00천원(공수의 0인)의 시·군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수의사의 예찰활동 현장검증(농장확인, 유선통화 등)없이 예산을 집행 하는 등 공수의사 관리업무 및 가축질병예찰 활동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수의사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을 준수하여 공수의 관리업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촉에 관한 사항, 공수의 업무부여 및 업무추진 결과 보고, 현장 확인 등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축산분야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강화군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고품질 돈육 생산으로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년 ‘우량모돈 교체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및 제17조(교부결정 통지) 등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수는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결정서를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교부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 ○○과에서는 20**.*.**. 「20**년 우량모돈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공문을 통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제출된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20**.*.**.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하였다.

또한 20**년 사업의 경우 20**.*.**.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하였으나, 20**년 0농가, 20**년 0농가에서 강화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구입한 모돈에 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우량모돈 교체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시행 시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유지 및 정산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 ○○과에서는 ㄱ면 ㄴ리 ***-#번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및 건축자재 보관 목적으로 20**.*.*. 신청한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20**.*.*. 허가처리 하였다. 허가권자는 농지가 과도하게 전용되거나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타지역(ㄷ면) 소재 주택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의 보관을 목적으로 가설건축물(00m²)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에도 해당 필지 전체면적인 00m²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였으며, 신청한 사용기간이 20**.*월부터 20**.*월까지임에도 20**.*월까지 사용 하계끔 허가처리 하였다

또한 20**.*.*. 허가 처리된 ㄱ읍 ㄹ리 ***-#번지 ‘가 신축공사 현장사무실(가

설) 설치'건에 대하여 신청인 ◇◇(주)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을 살펴보면 가설건축물 00㎡ 설치를 목적으로 00㎡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토지주 또한 20**.*.**.~20**.*.**.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체면적 00㎡ 중 00㎡만 사용 승낙하였으나, 강화군에서는 허가 처리 시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허가면적을 전체면적인 00㎡로, 허가기간을 20**.*.**.까지로 처리하는 등 농지타용도일시사용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를 시장·군수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 ○○과에서는 20**.*.**. 허가 처리된 ㄱ면 ㄱ리 ****번지 「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현장사무실 설치」를 위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처리시 복구비용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ㄴ면 ㄱ리 *-*번지, ㄷ면 ㄱ리 ***번지, ㄹ면 ㄱ리 ***-*번지 등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종료된 허가, 신고, 협의건에 대하여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확인 후 미이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예치한 복구대행비로 원상복구를 하는 등 사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처리시 농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허가 처리하시기 바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농지로 복구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후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수산보조사업(민간이전)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 장치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4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단체 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과 지방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수산보조사업(민간이전)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비드큐”라는 사적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가 사업”은 통합 발주 없이 비공개적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강화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과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사업담당공무원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 할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하고 보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 등 교육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어항개발(계획) 사업 추진 부적절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같은 법 제2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어항으로 지정하고 제19조의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이후 수립·변경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어항개발(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어촌·어항법」 제2조에는 어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였지만 어항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규모어항은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터전으로서 해상교통·지역관광·유통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어항 시설의 보수·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규모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분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관리하도록 관련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2012. 5. 23.) 하였다.

-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다.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그러나 강화군은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어촌정주어항으로 0개항을 지정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민원 및 기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기항 노교 시설공사 등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어항개발(시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소규모어항은 마을공동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어항개발(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어항개발(시설) 사업 추진 시 해안침식, 어항내 토사매물, 인공구조물 선형 변경 등에 의하여 사업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므로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항지정 및 어항개발(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어항개발(시설)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어업면허(양식어업)의 개시 등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식어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제1호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와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제2호 양식시설의 설치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를 끝내는 것, 제3호 양식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강화군에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어업면허에 대해 어업의 개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20**년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 0건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업 개시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하지 않는 등 양식어업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어업면허(양식어업)를 취득한 자에 대한 양식장 개시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 환급 절차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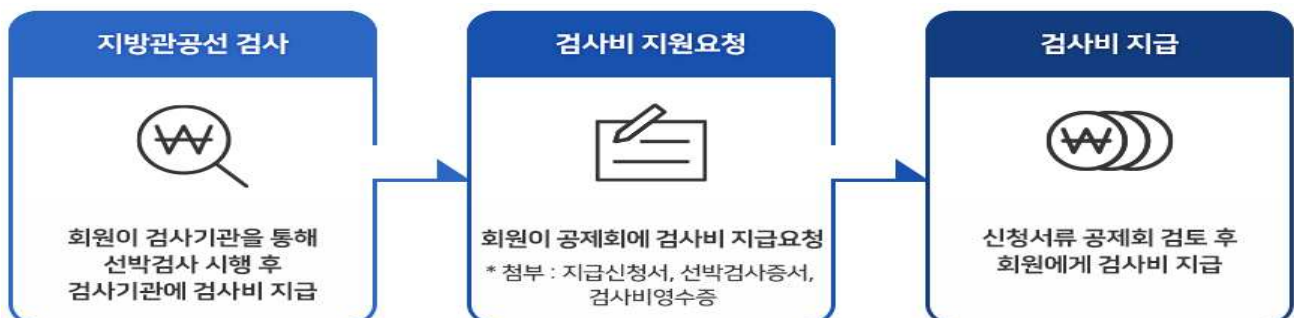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규칙」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지방관공선에 대한 의무검사비를 지원하여 회원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비 지원대상은 지방관공선 중 검사일 이전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지방관공선이다. “검사비”라 함은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전파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급기간은 선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법정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표1】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 환급 절차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검사일 이전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지방관공선 0척에 대하여 의무검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검사비를

환급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환급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규칙」 제5조에 따라 환급 절차를 거쳐 의무검사비 00원을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ㄱ 제작지원 사업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과 지방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는 정산 시 정산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 ○○과는 가 수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ㄱ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8~2021년 「수산 시비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를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관내 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의 어업인으로 명기하였지만, 가 수협은 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의 어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어업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강화군에서는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적보고서와 증빙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 지원대상자(관내 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의 어업인)의 적격여부 확인·점검 없이 가 수협에서 보내온 자료만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인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데도, 지출증빙자료 보완 등의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적정 집행을 것으로 정산을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등에 따라 비어업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00천원을 환수하시고, 그 중 시비보조금 00천원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관련 공무원에 대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 등 교육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가수협에 대하여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3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7조의4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또한 훈령 제77조의6에 따르면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 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도래 시 미반환금의 반환시기 경과여부 및 미반환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이월을 결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납부자에게 반환조치 또는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미반환금 및 세입 미조치가 00건 00천 원 발생하였다.

보관기간 경과 후 미 조치한 세입세출외 현금 주요내역으로는 □□이행 보증금, △△허가 복구비 등 보관금(잡종금)이 00건 00천 원, ◇◇보증금은 0건 00천 원, ◎◎보관금 0건 00천 원이다.

그 중 ◎◎보관금 00천원은 20**년도에 ◆◆과에서 「20**년 ㄱ 산업화지원 사업」 보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의뢰 한 것으로, 보조사업자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일부 기계·장비 압류 및 소송 등이 발생하여 해당 보조금 청구에 따른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 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강화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 압류해제와 보조금에 상응하는 담보 물건 제공 등을 이행하지 못하여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미반환금 중 해당 채권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 조치를 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0건 00천원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납부자에게 반환하고,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세입조치 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5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의2와 제8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서에 각각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의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의2와같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조3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은 ◇◇기금조례 등 총 0개의 기금조례가 있으나, 일부 기금조례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성과 분석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자체 작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서에 각각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별 조례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상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사항 준수, 성인지보고서의 포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신기술·특허 기술사용료 미계상 및 사용협약 이행절차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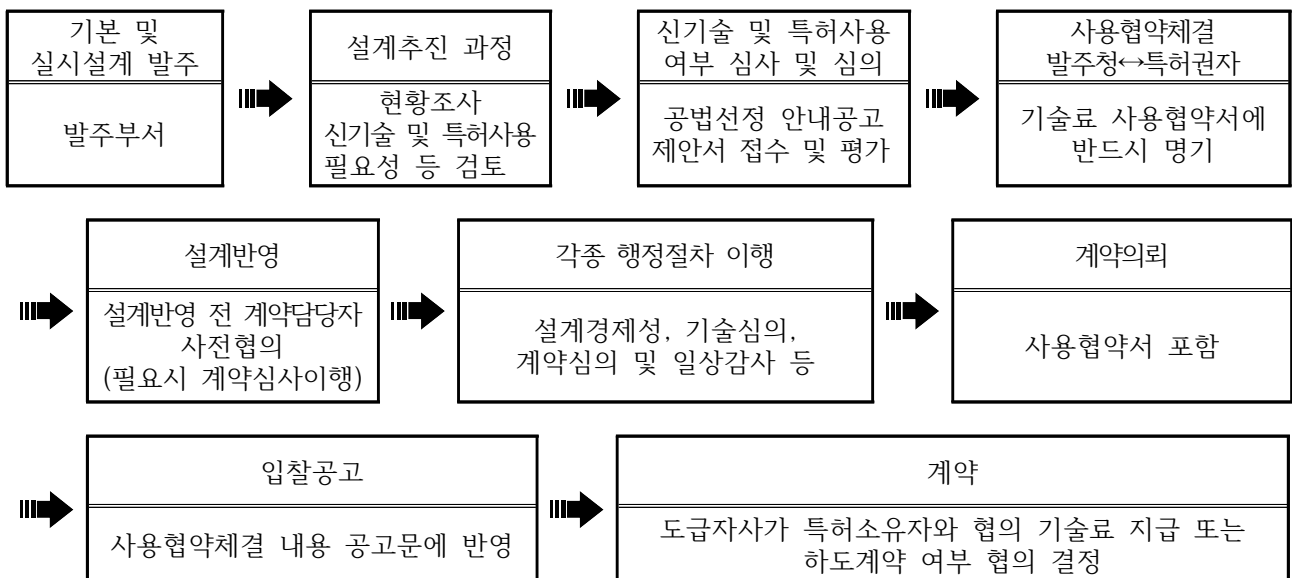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제3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참고]와 같다.

【참고】 신기술 및 특허적용 절차



강화군에서는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추진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 및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ㄱ 선형개량공사’ 등 0건의 공사에 있어 실시설계가 준공된 이후 공법심의 를 실시하고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2. 신기술·특허 기술사용료 미계상

발주 전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 한 후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기술사용료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기술보유자가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 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ㄴ읍 ㄷ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ㄱ 선형개량공사’ 에 반영된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시 기술사용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나 기술사용료를 0원으로 하였으며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 에 미계상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사용료가 설계에 계상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지원만 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신기술(특허)이 적용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기술보유자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나 강화군에서는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신기술(특허) 공법에 적용된 공사만큼은 특허권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결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향후 신기술·특허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반드시 명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 1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20**.**.**, 개정하였으나 제2조(위원회 구성) 제2항 ‘위원장은 강화군 경리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과 달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5호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삭제(16.1.15)된 이후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맞지 않는 관련 협회 추천인 및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개선]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시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로 사용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으며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 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20**~20**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 □□ 포함한 ◁◁ 직원을 대상으로 ◇◇을 구입하였고 ㉠·㉡, ◆◆◆는 예산 재배정을 통해 ◇◇을 구입하는 등 관련 규정 에 맞지 않게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업체 행정처분 등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 등을 위해 건설산업 정보망(KISCON)¹⁾을 통해 하도급제한 위반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교차 확인하여 적발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일괄 하도급 등 법 위반 혐의업체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고 있다.

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²⁾는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이나

1)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원·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별점통합관리시스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정부인트라넷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정보의 유통·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지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인천광역시에서는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구·군으로 위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강화군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건설(주)(대표자 A, ㄱㄴ공사업)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미통보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3호,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1항 [별표6]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4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주)□□(대표자 B, ㄷㄷ관리업)의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위반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 말소 등) 제3호 및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 기술인력) 00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통보 업체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읍·면공급용 초화 구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강화군 □□과에서는 읍·면별 꽃길 및 화단 조성 등을 통한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감사대상기간(2017. 12월 이후) 매년 읍·면 공급용 초화 구입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1. 분할계약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 7. 2만들기 화단식재용 계절별 초화를 구매하며 계절별 필요 물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괄 발주하였을 경우 입찰 등에 의한 경쟁 계약체결이 가능했음에도 분할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 의뢰하였고, ○○과에서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함으로써 경쟁 계약 대비 공정한 계약체결 및 예산 절감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또한 ○○과에서는 계약 의뢰된 초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므로 계약 의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계약체결 방식을 결정하여야 했음에도, 추정가격 산정 시 계약 의뢰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한 부적정한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업예산 재배정 관련 검토 미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및 [별표 4]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예산재배정은 본청에서 의회사무처(과), 시·군·구/읍면동, 제1관서의 재무관 또는 다른 제1관서나 시·군·구/읍·면·동 재무관에게만 가능하고,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국·과)장,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에서는 20**년도말 군수 지시사항에 따른 “ㄷ ㄴ 가로화단 추진계획”에서 읍·면별 특색있는 가로화단 조성대상지를 선정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읍·면별 사업비를 재배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 20**년도부터 해당 예산을 각 읍·면별 재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산의 재배정과 관련하여 기존 □□과에서의 총괄 예산집행 대비 읍·면별 재배정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읍·면별 특색을 반영하는 사업추진 효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검토가 미흡한 상태로 예산의 재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읍·면에서는 재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며 각 읍·면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기적으로 통합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일반지출 및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분할 구매함으로써 경쟁 계약 방식 대비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과의 기존 총괄 예산집행 대비 예산 절감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주의] ①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등을 준수하시어 물품의 구매에 있어 통합 발주 가능성 및 예산절감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추정가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부적정한 1인 견적 제출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계약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세출예산재배정 관련 사전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하도급계약 통보사항에 대한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4개 부서

내 용

강화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 중 총 00건의 공사에 대하여 0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서 및 첨부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통보서 및 첨부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했음에도, 서면에 의한 적정한 검토 보고 없이 통보사항에 대한 경유(경유필 도장 날인) 처리만 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감사대상기간 중 체결된 00건의 하도급계약 모두 발주자의 예정 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도급 계약 통보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계약 통보에 따른 내부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특히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행정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1.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라 한다.) 제98조(공사 완료의 공고 등)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에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미 이행

강화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그리 공영주차장(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등 0건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행정절차(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열람공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을 이행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준공) 되었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기간 내 완료 보고서를 제출 받아 공사완료 공고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에 공사완료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도로 점용(「도로법」 제39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관련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공고로 공용 개시가 된 시점부터 도로점용 관련 규정 적용) 규정(허가, 점용료, 변상금 등 각종처벌 규정 등)을 적용 할 수 없고 또한 실시계획인가 반복(변경 인가) 이행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지연 준공으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합병 등 미 이행

강화군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군도 등을 추진하면서 “◇○시장~□시장 (소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00건 00필지 00m²(00평)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 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적 소관청(강화군 □□과)에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 등 신청을 하지 않아 여러 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변경된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적 장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시정] 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공고 및 토지 지목 합병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시공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업개요

강화군에서는 20**년 *월 □□(주)와 계약을 맺고 20**년 *월 준공 예정으로 “군도**호선(ㄱ~ㄴ) 선형개량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적사항

가. 군도**호선 선형개량공사 기존 노면 포장 시공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ㄷ면 ㄴ리 일원 군도 **호선 도로 노선이 불량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실정에 연장 00km에 대하여 폭 6m에서 10m으로 확포장 선형개량공사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를 추진하면서 확포장(신설) 구간을 제외한 기존 포장 노면에 대하여 대형 브레이커(대형 브레이커 + 굴삭기 0.6~0.8m²)를 이용 아스팔트 깨기 후 노면을 신규 포장하도록 설계도서에서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포장(00m²)에 대하여 단가가 저렴(m²당 00원)한 노면 절삭기를 이용 절삭 후 덧씌우기(재포장)로 시공한다면 약 00백만원의 예산 절감과 민원발생(소음 발생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절삭 아스콘에 대하여 재활용이 용이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공방법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시도 **호선 도로개설공사(*-*공구)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관한 사항

ㄱ면 ㄴ리~ㄷ면 ㄱ리 일원 해안순환도로(광역시도**호선) 노선 미 개설로 차량 우회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과 새로운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에 연장 00km, 폭 00m의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 토공 노체 공종 등에 외부 반입 토사(순성토)가 00m³ 필요함에 거리 00km인 >>에서 운반하여 시공하도록 설계서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 관내에서 추진 중인 가 조성사업 등 0개 현장에서 외부 반입 토사(순성토)를 반입하면 운반거리 단축(평균 운반거리 00km) 및 무상사용함으로써 약 00백만 원의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도로 연장을 확대 할 수 있음에도 공사감독은 감사일 현재까지 시공방법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시정] 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지어건 등과 설계도서가 부합 되지 않는 공종에 대하여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 설계변경(감액 00백만 원)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②앞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8개 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구성에 있어 경비 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 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시공자가 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3. 지적사항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강화군 □□과 등 9개 부서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경계 펜스, 차량유도 등, 라바콘’ 등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 간판 등의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 00건 00백만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이드라인 작성 소홀

강화군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 관리비에 대하여 사용 확인 및 정산 등에 있어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사 마다 편차 있는 사용 내역 등을 시공자가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군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ㄱ 개설공사(20**년)”에 안전화 1켤레를 00원에 구입한 반면 동일 년도 “ㄴ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에서는 안전화 1켤레를 00원에 구입하는 등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공사가 제출한 사용 내역 원안으로 감액 조정없이 지급하였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구입한 00개의 안전화 평균 구입비는 00원으로 강화군 ㄱ직 안전화 평균 구입비인 00원과 비교 적용할 시 개략 00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또한 안전모는 “2000년 복합 ㄴ 설치(가지역) 공사”에 개당 00원에 구입한 반면, 동일 년도 “ㄷ 노후시설(리모델링)보수공사’에서는 안전모를 개당 00원으로 구입하였고 최근 3년간 건설공사에서 안전모를 구입한 개수는 00개(평균 00원/개당)로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인터넷)으로 구입시 안전모 적정가인 00원(개당)으로 구매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개략 00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안전 장구 지급에 따른 지급대장(지급자 주소,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등과 연계 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 및 정산 하여야 함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구매 영수증과 사진만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공사기간 및 투입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정산) 실무 가이드(예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0000-00호, 0000.00.00.]에 따른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확인(정산)
- 안전장구[안전화 한 켤레 60,000원] 확인(정산) *무기계약직 안전화 구입비 적용
- 안전관리 사용내역 확인(정산) 방법
 - 사용내역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 확인(정산)
 -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안전장구 지급대장 작성 및 증빙 사진(근로자 착용 전신 사진 등) 확인(정산)
 - 안전관리비로 구매하는 단일물품(100만 원 이상) 등은 손을 또는 렌탈로 구입 정산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약 00백만 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 정산할 수 있도록 당해 년도 건설사업 설계기준(안) 작성에 안전관비 사용내역(정산) 확인 가이드를 작성·수록하여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시 증빙자료 확인에 활용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임시창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여부 등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알려야한다.

그리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내용 및 시정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청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 된 후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강화군 ㄱ면 ㄴ리 **번지 상 가설건축물 등 00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장기 미착공·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공사에 착수하였어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지 주변의 환경·토지이용계획, 관련 법률의 변화 등에 따라 추후에 공익에 반하는 건축물이 건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구청장은 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청에서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20**년 이전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착공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ㄱ면 ㄴ면 *****
외 1필지 등 00건의 건축허가(신고)가 나대지 상태 등으로 실질적으로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①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실태 현황조사를 통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일 기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내의 2필지 이상의 건축물대장 현황은 ㄱ면 ㄴ리 ***-**외 1필지 등 00건이 2필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지이동 사항을 확인한 결과, ㄴ면 ㄴ리 ***-**외 1필지 등 00건이 토지이동(합병)되어 지번이 말소되었음에도 건축주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사유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분할·합병 신청서 사본)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이에 따른 협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불일치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사항 등을 초래하도록 건축물대장 관리에 소홀히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토지와 불일치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지적공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건물번호의 변경·폐지절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도로명주소법」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 따르면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2017. 12. 1~)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내의 건축물 철거·해체(말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강화군 ㄱ면 ㄴ리 ***-*번지의 00건의 철거·해체(말소)가 시행되었으나, 이중 00건에 대하여만 폐지·고시를 이행하고, ㄷ면 ㄹ리 ***-*번지의 00건의 말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번호의 폐지·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건물번호 폐지 미고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라며, 도로명주소 부여 시스템(KAIS)등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철거·멸실된 때에는 지적 관련 부서에 철거·멸실 사항을 통보하여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토지의 조사·등록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토지의 조사·등록)에 따르면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2017. 12. 1~)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내의 건축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사용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00건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었고, 건물 주용도에 맞게 지목이 관리되고는 있었으나 ㄱ면 ㄴ리 ***번지 등 00건의 지목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목변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사유를 들어 지목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불일치하게 관리하는 등 토지의 조사·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동현황 조사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동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강화군 ○○과에서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관리업무 소홀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면적³⁾이 500제곱미터 이상⁴⁾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5에 따라 군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날

3)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4) 「산업집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00개 업체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등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업무 소홀

「산업집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에 따라 군수는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 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19**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공장등록된 업체 중 00개소의 공장이 무단 폐업을 하였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등 등록된 공장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00개 업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무단 폐업한 00개소의 공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확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군수 직권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취소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의 ‘기업정보관리>기업정보 검색>미등록 공장조회’ 또는 ‘기업정보관리>연계정보검색>휴·폐업 공장조회’ 검색기능 등을 활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관리업무와 공장등록업체의 사후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권고

제 목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의 유지관리업무 소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역지원사업⁵⁾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 2018~2020년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미 작성,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미 기입, 하자검사 미 실시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검토 필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5)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가 주로 주차장 또는 건물 옥상에 구조물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풍하중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과 해당 설비가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설비의 관리 하자 또는 태풍·강풍·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군민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공공의 영조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작성·비치,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기입, 정기·최종하자검사 실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태양광발전설비의 관리 하자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강화군 ○○과에서는 ㄱ 산책로(강화ㄴ *코스)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조명시설에 대한 교체공사와 강화 ㄷ를 강화군 북부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ㄴ 건립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

1. 관급자재 구매 시, 물품 계약방법 및 자재 선정에 대한 검토 소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2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등에 따라 조달청은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3조(2단계경쟁 대상),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10조(가격제안)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동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대상에 해당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개사(2개사 가능)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제안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지역 업자의 자재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사용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ㄱ 산책로 조명교체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규격과 회사가 다른 제품이라는 사유로 통합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한번에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3자단가 계약의 방법으로 분할 구매하였으며,

인천지역에 동일한 세부품명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구매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물품 계약방법 및 자재 선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2. 준공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ㄴ 건립 전기공사’ 공종별 내역 중 전기 인입 핸드홀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 설계서인 특별시방서와 설계도면에서는 핸드홀의 커버는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내부는 방수가 되어야 하고 핸드홀의 하부 중앙에 설치된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ㄱ 건립 전기공사’ 준공검사 시, 전기 인입 핸드홀 내부에 배수처리 불량 등의 시공상 하자를 발견하고서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주의] ①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계약방법 적용대상 여부와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구매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물품을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공사의 준공검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강화 ㄱ 경관개선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강화군 ○○과에서는 강화군 남단의 진입관문인 ㄴ면 ㄷ대교 4거리 일원에 강화 나들길과 연계한 각종 도보 관광객과 자차 관광객의 쉼터 및 만남의 장소로 명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ㄱ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내 조도 확보를 위한 공원등·투광등·수목 조명 설치 등의 전기공사와 경관개선사업 주변 CCTV 설치를 위한 통신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 시공단계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ㄱ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의 설계서인 공사시

방서에 시공 전 자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주요 자재인 전선관, 케이블, 전선, 분전반, 투광등 Pole 등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 시공자로부터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계법규 및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관계법규 미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ㄱ 경관개선사업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경관 개선사업구간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고자 설치할 계획이었던 0개소 00대의 감시카메라(CCTV)에 대하여 사전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통보

제 목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미충족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관내 00개소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영주차장 00개소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00면이 부족한 상태로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 초래 및 편의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미충족

정부에서는 「주차장법」 관련하여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1. 4. 16.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국토교통부령 제843호)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다.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친차”이라 한다)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해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친차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영(노외)주차장의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00개소의 노외주차장 중 00개소에서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강화군에서는 소요예산 확보 및 같은 규칙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2022. 4. 15.까지 환친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20**.**.*. 개정된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환친차 전용주차구획과 관련된 내용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친차 등록현황 및 이용실태, 주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친차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시정] 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설치예산 확보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시고,
-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설치예산 확보 및 경과조치 기한 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현황 및 이용실태, 주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4호 단서조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비율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강화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20**년 도로점용허가(차량출입시설 및 지하매설물)에 따른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함에 있어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20**년 *월 **일에 부과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징수율 또한 13.8%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관련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처리한 00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착공계(00건) 및 준공계(00건)를 제출하지 않고 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시행 여부를 검토할 수 없어 하자 발생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또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 미제출로 도로 내 지하매설물 관리 및 정확한 도로점용료 산정·부과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행정조치(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주의] ① 도로점용료(정기분) 부과 시 법적기한 준수 및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업무와 관련한 행정절차(착공계, 준공계)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보관·관리를 통하여 지하매설물 현황관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 누락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지하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강화군 사토장 토석 활용방안 검토 소홀

기 관 명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강화군 ○○과에서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파석(토석 포함) 등을 활용하고자 ㄱ면 ㄴ리 **~**번지 내 임시 사토장(이하 “사토장”이라 한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ㄷ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약 00m³의 토석이 반입되어 관리 중이나, 야적 장소가 부족으로 토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감사일 현재 강화군에서 토석이 다량으로 필요한 사업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강화군과 @@공사 간 설계·시공 등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연차별로 시행중인 ㄴ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및 ㄹ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이 있다.

ㄴ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0**년 *월 공사 착공하여 20**년 **월 준공 예정으로 방조제 보수보강 L=00m, 수제공 0개소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의 설계도서에는 수제공에 필요한 토석 물량(00m³)이 관급자재(현장도착도)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한 규격이 필요하지 않은 수제공에 소요되는 토석 물량은 사토장에 보관 중인 토석을 활용(현장채집, 상차, 운반을 제외)할 경우 개략공사비 00천 원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 등 관련조치를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ㄹ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방조제 보수보강 L=00km, 수제공 0개소 정비 등을 위하여 감사일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 또한 일정한 규격이 필요한 앞사석을 제외하고 일정한 규격이 필요하지 않은 수제공에 소요되는 토석(00m³)은 사토장에 보관 중인 토석을 활용(현장채집, 상차, 운반 제외)할 경우 관급자재(현장도착도)로 구입 대비 공사비 약 00천 원을 절감할 수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설계 반영 등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시정] ① ㄴ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관련하여 강화군 임시 사토장에 보관 중인 토석을 활용하여 설계변경(감액: 약 00백만 원)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 ② 또한 ㄹ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도 강화군 임시 사토장의 토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군수 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20**. *. *. □□(주)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버스이용객 및 소속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ㄱ로(법정도로)에서 ㄴ천 제방도로 및 콘크리트 진입도로를 사용하여 진·출입하는 계획으로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개발행위(신규)허가를 강화군 ○○과에 신청하였고, 20**. *. *. 부설주차장 설치(대형주차장 0대, 자주식 옥외주차 00대)에 따른 개발행위(신규)허가를 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 *. *. □□(주)는 강화◆◆◆을 운영함에 있어 대형버스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허가사항을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대형주차장 00대)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으로 변경하고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 *. **. 개발행위허가 부서인 ○○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변경허가 처리하였다.

그런데, 20**. *. *. 개발행위(신규)허가 신청 당시 주변지역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강화군 ◆◆㉠과에서는 부족한 시내버스 차고지 확충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ㄷ읍 ㄹ리 ***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 *. *.)’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ㄷ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규모: 대형주차 00면, 소형주차 00면, 면적 00㎡)를 조성하기로 결정 고시(20**. *. **.)하였고,

20**. *. **.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의 대형차량 주차확보 취지에 적합하도록 소형주차장 계획을 제외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공영차고지(규모: 대형주차 00면, 면적 00㎡)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 **. **.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 0개사(가 00대, 나 00대, 다 00대, 라 00대)에게 5년간(20**.

*. *. ~ 20**. *. **.) 00면의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고 현재 차고지로 이용 중에 있다.

또한, 개발행위(신규·변경)허가 토지와 인접한 하천구역인 ㄴ천은 ㉠㉡본부에서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 방지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 *. **. ‘하천구역(변경) 결정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수립 고시’하였고, 20**. *. **. ‘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본 사업을 20**. *. **.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처리와 제방 준성토 운반 및 흙쌓기 작업 중에 있고 20**. *. *.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3. 개발행위(신규·변경)허가 처리 부적정

가. 개발행위(신규)허가 검토 소홀

20**. *. *. □□(주)에서 ○○과에 개발행위(신규)허가(토지형질변경 00m²) 신청한 주된 목적은 부설주차장(대형주차장 0대, 자주식 옥외주차 00대)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주차장 이용차량은 현행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ㄴ천 제방도로(폭 0M)를 이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주된 진·출입로인 ㄴ천 제방도로와 신청부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폭 0M)로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대형버스 및 승용차의 교행 가능여부 등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신청자인 □□(주)에 보완요구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행위(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기관(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①제방도로가 차량중량, 차량교행, 통행량 등과 관련하여 진·출입로(기존도로)로 적정 여부, ②하천시설 유지관리 문제점, ③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한 하천공사계획 지장 여부, ④제방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시유지 0필지: ㄴ리 ***-*(천), ****-*(도)]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여부, ⑤신청부지와 인접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시설의 종류: 공영차고지)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신규)허가 현장 확인에

따른 출장복명서 결재 후 20**. *. *. 허가처리를 하였다.

나. 개발행위(변경)허가 검토 소홀

20**. *. *. □□(주)에서는 부설주차장 부지조성을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대형주차 00대) 부지조성으로 변경하고자 사업계획서에 소형·대형차량의 진·출입로 계획이 포함된 공사계획도를 작성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토지형질 변경 00m²)를 ○○과에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에서는 신청대상지와 인접한 ㄷ읍 ㄴ리 ***번지 일원에 20**. **. **.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 0개사(가 00대, 나 00대, 다 00대, 라 00대)에게 5년간(20**. *. *. ~ 20**. *. **.) 00면의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 하였으며,

하천구역인 ㄴ천은 ㉠본부에서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 방지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 *. **. ‘하천구역(변경) 결정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수립 고시’하였고, 20**. *. **. ‘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0**. *. **. 착공을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개발행위(변경)허가 사업계획서의 공사계획도를 확인한 결과 소형차량 진·출입로로 계획한 기존 제방도로는 철거 후 제방도로 폭 0M로 시공계획(준공 예정 20**. *. **.)이고 제방도로 신설 포장 및 준공시기를 감안하면 □□(주)에서 소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기에 부적합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강 □□(주)에 보완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화군 ▷▷과에서 20**년도 제00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공영차고지 진·출입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통행토록 조치]에 대하여 조건부 수용사항을 ○○과에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관련기관(부서)과 협의의견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행위(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시 요구되었던 검토사항

및 협의의견 수렴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협의) 없이 개발행위(신규)허가 신청 때와 동일하게 개발행위(변경)허가 현장 확인에 따른 출장복명서 결재 후 20**. *. **. 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4. 개발행위(변경)허가 준공 부적정

○○과에서는 개발행위(변경)허가 관련하여 □□(주)에서 20**. *. **. 개발행위(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20**. *. **. 개발행위(변경)허가 준공 통보 및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대형주차 00대) 개발행위(변경)허가 진·출입계획에 따르면 소형차량은 하천시설, 대형차량은 공영차고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형차량의 경우 공영차고지 법면부(ㄷ읍 ㄹ리 ***번지 좌측 하단부)에 연결로⁶⁾를 설치하여 공영차고지 내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확인 결과 ①소형차량 진·출입도로로 이용되는 ㄹ리 ***-**번지는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보상매입(면적: 00m², 20**. *. **.)된 토지로 □□(주)에서 무단으로 진입도로를 설치(토사 성토)하여 이용하고 있고, ②대형차량 진입도로의 경우 공영차고지 법면부 전체(ㄷ읍 ㄹ리 ***번지 하단부, 면적: 약 00m²)를 무단으로 연결로를 설치(토사 성토 및 잡석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③같은 번지 공영차고지 우측 법면부는 무단으로 성토 및 잡석 포장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변경 신청 당시 ㉠㉡본부에서 시행한 ‘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 *. **. 준공되었고 기존 제방도로는 전체 철거 후 폭 0M로 시공 예정임에도 현재 차고지의 일부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변경) 준공 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 시 ①소형차량 진입도로 관련 하천시설 이용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 여부, ②대형차량 진입도로 관련 공영주차장 이용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 여부, ③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공사계획도(진·출입로 계획)대로 공사이행 여부, ④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6) 연결로: 공영차고지 법면부를 성토하여 공영차고지 내부(진입도로)와 민영차고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일부분

허가조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여부 등을 사전에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또는 합동점검하고 종합적인 검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진입도로는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서 재산관리부서와 사용허가 대상 여부 등을 협의하여 조치하시고, 무단 성토 등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영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군수 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20**. *. *. □□(주)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버스이용객 및 소속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ㄱ로(법정도로)에서 ㄴ천 제방도로 및 콘크리트 진입도로를 사용하여 진·출입하는 계획으로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개발행위(신규)허가를 강화군 ◆㉠과에 신청하였고, 20**. *. *. 부설주차장 설치(대형주차장 0대, 자주식 옥외주차 00대)에 따른 개발행위(신규)허가를 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 *. *. □□(주)는 강화◆◆◆을 운영함에 있어 대형버스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허가사항을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대형주차장 00대)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으로 변경하고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 *. **. 개발행위허가 부서인 ◆㉠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변경허가 처리하였다.

그런데, 20**. *. *. 개발행위(신규)허가 신청 당시 주변지역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강화군 ○○과에서는 부족한 시내버스 차고지 확충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ㄷ읍 ㄹ리 ***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 *.*.)’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ㄷ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규모: 대형주차 00면, 소형주차 00면, 면적 00㎡)를 조성하기로 결정 고시(20**. *. **.)하였고,

20**. *. **.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의 대형차량 주차확보 취지에 적합하도록 소형주차장 계획을 제외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공영차고지(규모: 대형주차 00면, 면적 00㎡)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 **. **.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 0개사(가 00대, 나 00대, 다 00대, 라 00대)에게 5년간(20**.

*. *. ~ 20**. *. **.) 00면의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고 현재 차고지로 이용 중에 있다.

또한, 개발행위(신규·변경)허가 토지와 인접한 하천구역인 ㄴ천은 ㉠㉡본부에서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 방지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 *. **. ‘하천구역(변경) 결정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수립 고시’하였고, 20**. *. **. ‘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본 사업을 20**. *. **.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처리와 제방 순성토 운반 및 흙쌓기 작업 중에 있고 20**. *. *.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3. 개발행위(변경)허가 협의 관련 검토 소홀

○○과에서는 20**. **. **.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 0개사(가 00대, 나 00대, 다 00대, 라 00대)에게 5년간(20**. *. *. ~ 20**. *. **.) 00면의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고 현재 차고지로 이용 중에 있다.

20**. *. *. □□(주)에서는 강화◆◆◆을 운영함에 있어 대형버스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대형주차 00대, 토지형질변경 00m²)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으로 변경하고자 건축허가과에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 *. *. ◆㉠과에서는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과에 공영차고지를 차고지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대형·소형차량 진·출입로 계획이 작성된 공사계획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관련법 적정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협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과에서는 공영차고지 관리부서로서 협의사항 검토 시, 운송사업자 0개사에 사용·수익허가 중인 공영차고지를 개발행위 신청부지(차고지)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①관련법(공유재산법 등) 저촉 여부, ②진입도로 사용계획(위치, 면적 등) 적정 여부, ③차고지 이용차량 진·출입 시 공영차고지 이용차량과의 저촉 여부(이동동선 등), ④연결로 적정성 및 기 조성된

주차구획면의 축소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강화군 ▷▷과에서 개최한 ‘20**년도 제00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수용: 공영차고지 진·출입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통행토록 조치]에 따른 조치(협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검토 없이 개발행위(변경)허가 협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주차장법」 저촉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개발행위(변경)허가 준공 관련 공영차고지 관리 소홀

□□(주)이 운영 중인 차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①대형차량 진입도로 경우 개발행위(변경)허가 도면과 다르게 공영차고지 남측 법면부 전체(ㄷ읍 ㄴ리 ***번지 하단부, 면적: 약 00m²)를 무단으로 개발행위 신청부지(차고지)의 연결로⁷⁾로 설치(토사 성토 및 잡석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②같은 번지 우측 법면부는 무단으로 성토 및 잡석 포장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주)의 개발행위(변경)허가 준공 신청과 관련하여 ①관련법(공유재산법 등) 저촉 여부, ②공영차고지 내 진입도로 사용계획 적정 여부, ③공사계획도대로 연결로 설치 여부, ④기 조성된 주차구획면의 축소에 따른 관리·운영상 문제점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완료한 공영차고지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① 공영차고지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고, 실시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차고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결로: 공영차고지 법면부를 성토하여 공영차고지 내부(진입도로)와 민영차고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일부분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 등 0개사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유입수질 관리 미흡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법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정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각 처리공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대상 축산농가 및 수거업자 등에 대하여 설계유입수질 범위 이내로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도록 농도통제를 실시하는 등의 유입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유입수질의 수질검사는 방류수수질기준 6개 항목(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유입수질이 설계유입수질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유입농가의 반입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고농도의 폐수유입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 ○○과는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리시설의 위탁운영 기간 동안 유입수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위한 인건비(고정비-비정산)를 매년 용역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입수질 검사를 관련 규정과 달리 주 2회만을 시행하였으며, 유입 설계수질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축산농가 및 수거업자에 대한 조치를 미이행 하는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유입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용역 준공정산 소홀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20**.*.)」와 「용역(협상) 전자입찰 공고(강화군 입찰공고 제20**-***호)」에 따르면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의 용역예정(기초)금액을 00천원으로 원가산정 및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수선 유지비, 약품비, 시험검사비 등 변동비는 정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강화군 ○○과는 상기 원가산정 내역을 근거로 20**년 ~ 20**년(3년) 위탁 용역을 (주)●●과 체결하고 매년 용역 준공정산을 실시하면서, 변동비(정산비)인 방류수 시험검사비를 시장가 조사 등을 통한 실비로 정산하지 않고 지출증빙 등 확인 없이 원가 산정시의 단가(00천원/회)를 그대로 적용하여 정산함으로서 용역비 약 00천원[회당 약 00원 저렴]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주의]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관리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유입 설계수질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축산농가 및 수거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용역 준공정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주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 등”이라 한다)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출신고자는 건설 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강화군 ○○과는 “ㄱ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0개 건설공사에 00톤의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ㄴ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00개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 [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의무사용량 이상 사용 및 사용계획서·실적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요구·권고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히 흘러 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등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의 규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등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의 규정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는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 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준공신고)의 규정에 따르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등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20조(수질검사 등),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질검사대상) 및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먹는 물, 생활용수·공업용수(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음용수 2년(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또는 생활용수 등 3년 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강화군 ○○과는 20**. *월 ◆◆감사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적정”으로 이미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월부터 2021.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수리한 총 00건 중 00건에 대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효력 상실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00건의 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착공 또는 준공 여부를 알지 못하여 이행 보증금 약 00천원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2년 또는 3년 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00개소 지하수 시설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지하수법」에 따라 준공신고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착공일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ㄱ 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1)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2)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4)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정산절차에 따라 공사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를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과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20**.*.*까지 「ㄱ 공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하여 20**.*.* 정산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금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강화군 ○○과에서는 “ㄱ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을 하면서 사업주 부담금액에 대하여만 정산을 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 부담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을 한 결과 00원을 과다 지출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① 건강·연금 보험료 사후 정산검토를 소홀히 하여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된 00원을 즉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공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ㄱ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기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린이놀이기구법』 및 『어린이놀이기구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놀이기구 및 기구별 안전점검 항목을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기구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어린이놀이기구를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7]의 보험의 보상한도액([붙임1] 참고)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놀이기구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가입하여 어린이놀이 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과에서는 주거단지 인근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의 정서함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0**.*.**. 기읍 ㄴ리 ***-#번지 일원에 ㄱ 조성공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인 강화군 ○○과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후 ‘**.*.**.~‘**.*.**. 설치검사를 완료하고(합격) 20**.*.**. 준공검사 및 시설물인수 후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1회만 실시하였고, 20**.*.**. (사)●●협회에서 ㄱ 물놀이 놀이터 안전교육을 A가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정보란에 이를 작성하였으나, 상기인은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바 없는 ○○과 직원으로 강화군 종합감사 현재까지 지정된 안전관리자들 중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는 없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한도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ㄱ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을 적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시스템 보험가입란에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보상한도액에 적합하도록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게 각별히 주의 조치하시고,

③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강화군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구 분	제 목	관련부서
수범사례 1	강화군 국국장 건립사업	행 정 과
수범사례 2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자치교육과
수범사례 3	코로나 극복 문화행사 ‘자동차 극장’ 운영	문화관광과
수범사례 4	강화군 행복센터 건립 및 운영	사회복지과
수범사례 5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지적과
수범사례 6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전총괄과
수범사례 7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지속 추진	경제교통과
수범사례 8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환경위생과
수범사례 9	효율적인 토사은행 운영으로 예산절감	도 로 과
수범사례 10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으로 토지분쟁 해결	도 로 과
수범사례 11	갑룡공원 조성 및 운영	산림공원과

□ 추진배경

- 역사의 고장 강화군에 국궁장을 건립하여 국궁의 전통을 계승하고 활성화하여 군민 심신수양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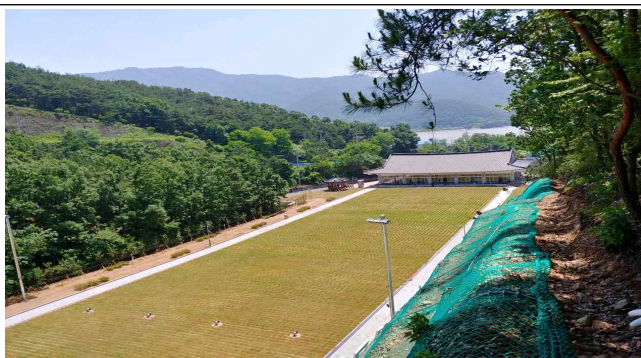
- 사업위치 :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5번지 일원
- 사 업 비 : 5,640백만원[국비 1,156, 시비 1,349, 군비 3,135]
- 사업기간 : 2019. 11. ~ 2021. 6.
- 사업내용 : 국궁장 조성(13,281㎡) 및 한옥건축물(512㎡)

□ 주요성과 및 실적

- 2019. 12. : 도시계획시설결정(체육시설) 및 실시설계 등 용역 발주
- 2020. 04. : 각종 인허가(환경, 도시계획, 문화재, 군사 등) 협의
- 2020. 07.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1. 06. : 공사 준공
- 2021. 08. : 강화군 궁도협회 위탁운영 실시

□ 기대효과

- 강화군 국궁장 건립을 계기로 단절된 정통 활쏘기 명맥을 잇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공간이자 생활체육 공간으로 큰 역할 기대



국궁장 전경



국궁장 정면도

☐ 추진배경

- 독서문화 활성화 및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지식·정보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591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복합화 건립(1,189m²)

☐ 주요성과 및 실적

- 2019. 5. : 건립부지 매입
- 2019.12. ~ 2020.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0.11. ~ 2021.09. :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 2021.10. ~ : 개관준비(장서및가구 구입, 자동화장비 설치, 사인물 설치 등)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 접근성 개선 및 평생교육 증진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복합화 하여 지역주민 커뮤니티 강화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화향유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최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상황에도 문화예술 행사 중 관람률이 높은 영화(56.4%) 분야의 콘텐츠 제공

그림 2-2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단위: %]



※자료 출처: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개요

- 사업비 : 회당 40,000천원
- 사업기간 : 2021년 총 2회 (8월, 10월) / 회당 4편의 영화 상영
- 사업내용 : 차량 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최근 개봉되었거나 개봉작 중 작품성이 높은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
- 장소 : 갑곶돈대 주차장 (1일 90대)
- 관람객 선정 : 사전예약에 의한 선착순 접수

□ 주요성과 및 실적

- 8월 자동차극장 관람객 수 : 총 314대 차량(794명) 관람
- 행사 사진



행사장 전경

영화 상영

□ 기대 효과

- (자체 노력도) 여가문화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휴식이 있는 삶’ 을 구현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가족 여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누리는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마련
- (효과성) 문화 사각지대 해소
 - 행사를 진행한 전쟁박물관 주차장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또한,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 해소
- (확산가능성)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
 -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맞는 비대면 문화예술의 행사가 대면행사의 대체재가 아닌 독립재로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하여 문화예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

수범사례 4

강화군 행복센터 건립 및 운영

□ 추진배경

- 생애주기별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화읍 남산리 213-2 일원 (구 보건소)
- 사업비 : 20,675백만원 (국 11,500, 시 2,750, 군 6,425)
- 사업기간 : 2019. 8. ~ 2021. 12.
- 사업내용 : 지하 2층 · 지상 6층, 건축 1,210㎡, 연면적 8,968㎡ (2,718평)
- 공 정 율 : 77% (내 · 외부 마감 공사 진행 중)
- 주요시설

(단위: 평)

구 분	총평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 요 시 설
계	2,718	2,274	444	
지하2층	396	379	17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주차장
지하1층	409	392	17	○ 방재실, 창고, 우수관리층, 주차장
1층	243	170	73	○ 농산물판매장, 마을식당·카페, 키즈카페 및 창고 등
2층	361	322	39	○ 키즈카페
3층	323	228	95	○ 노인여가시설, 도시재생센터, 마을관리협동 조합사무실 등
4층	329	263	66	○ 재봉실, 요가실, 프로그램실, 교육준비실 등
5층	329	272	57	○ 조리실, 제과제빵실, 프로그램실, 센터사무실
6층	328	248	80	○ 다목적실, 기자재실, 장병휴게실, 탁구장

□ 주요 사업

구 분	사업내용	서비스대상
키즈카페운영 (2층)	○ 감각적인 실내놀이기구 설치(테마존 구성) - 공간연출 : 거대 개미굴, 하늘 산책길, 오로라 호수 - 정적놀이 : 역할놀이, 블록놀이, 창작놀이 - 신체놀이 : 복합 정글짐, 트램폴린, 무한 미끄럼틀	영유아, 아동
도시재생사업 (1.3층)	○ 낙후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지역특색을 살리는 사업추진 - 집 수 리 사 업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집수리 및 공구대여사업 등 추진 - 카페테리아운영 : 마을협동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기부 사업 등 추진	구도심 주민
평생프로그램 운영 (4.5.6층)	○ 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자격증반 : 조리, 제과제빵 등 - 취미교실 운영 : 재봉, 미술, 악기, 어학 등 - 건강교실 운영 : 요가, 댄스, 헬스, 탁구 등	누구나

☐ 주요성과 및 실적

- ('18.10.) 사업부지 확보
- ('18.11.) 군의회 공유재산 사용 승인
- ('19. 6.) 기존 건물(구 보건소) 철거
- ('19. 8.)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확정
- ('20. 5.까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설계공모, 경관심의, BF예비 ·
녹색건축 · 에너지효율등급평가인증 등 사전행정절차
- ('20.11.) 설계납품 및 공사 착공
- ('21. 6.) 운영조례 공포
- ('21.10.현재) 내 · 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

☐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
으로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

☐ 위치 · 조감도



□ 추진배경

-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0,000천원 / 순번 대기표 설치 20,900천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읍면 순번대기표 설치

□ 주요성과 및 실적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 교동면 1개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완료 → 강화군 총 9대 운영
- 순번대기표 설치
 - 11개 면사무소 민원인 순번대기표 설치 완료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삼산)

□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민원서류 발급 편의성 증대
- 순번대기표 설치로 민원처리 대기시간 감소 및 편의성 증대

수범사례 6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365일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CCTV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연계현황

(2021. 10월 기준, 단위 : 대)

계	방법	차번 인식	재난	체육 공원	나들길 안 전	문화재 보 호	어린이 안 전	어린이 보 호	주정차 단 속	주차 방법	마을 방법	길정천	산불/ 공원 방법
1,029	588	28	51	10	8	90	9	61	23	74	54	7	26
관 리 부 서	안전총괄과(667)			행정과	문화관광과(98)		사 회 복지과	경제교통과(158)			도 시 개발과	건설과	산 림 공원과

주요사업(2021년)

○ CCTV 신설

- 예 산 액 : 295백만원(시비 205백만원, 군비 90백만원)
- CCTV 신설 : 28개소 70대(재난 13개소 30대, 방법 15개소 40대)

○ CCTV 비밀번호관리 시스템 구축

- 예 산 액 : 52백만원
- 내 용 : CCTV 800대 시스템 연계

○ 스마트관제 시스템 고도화(지능형)

- 예 산 액 : 44백만원
- 내 용 : CCTV 100대 지능형(딥러닝) 구축

주요성과 및 수범사례

구분	연월일	건수	내용
영상정보 열람/제공	2019년	527	경찰서 사건·사고 수사자료, 불법무단투기
	2020년	318	경찰서 사건·사고 수사자료, 불법무단투기
	2021. 10월	556	경찰서 사건·사고 수사자료, 불법무단투기
주요 수범사례	2020. 4월	14	관내 대교(강화·초지·교동·삼산) 투신자살 등 각종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CCTV 긴급설치 ※CCTV 4개소 8대, 비상벨 10개소 10대
	2021. 7. 7.	1	강화경찰서 상황실에서 차량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 차량을 모니터링 및 도주경로를 실시간 무선전파하여 현장에서 검거
	2021. 7. 8.	1	자살의심자가 차량을 이용해 관내로 진입했다는 경찰서 상황실 통보를 받고, 즉시 동선파악 및 경찰서와 공조하여 자살의심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가족에게 인계
	2021. 9. 8.	1	용흥궁화장실 앞에서 학생들 간 집단폭력 확인 후, 경찰서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더 큰 사고 예방

☐ 사진자료



강화대교 CCTV(투신자살 예방 및 대응)



통합관제센터 내부



스마트관제 화면 표출(객체 분석하여 화면 표출)

수범사례 7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지속 추진

☐ 추진배경

- 강화읍 원도심,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등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구 분	2019년 ~ 2021년도	2022년도(신규, 이월사업)
사 업 비	36,162백만원 (국 10,215, 시 2,917, 군 23,030)	8,250백만원 (국3,375, 시비750, 군4,125)
사업기간	2019. 1. ~ 2021. 12.	2021. 1. ~ 2022. 12.
사업위치	19개소	5개소 (신문 제2, 신문 제3, 관청리, 외포리, 내리 선수항)
사업내용	47,510㎡ / 1,380면	18,173㎡ / 553면

☐ 주요성과 및 실적

- 2019년 : 공사완료(4개소)
 - 공사완료 : 동문안, 신문, 관청 제2, 화도면 동막해변
- 2020년 : 공사완료(8개소)
 - 공사완료 : 관청 제1, 관청 제3, 갑곶, 남문, 창리 제2(1차), 대룡리, 매음리, 매음 제1
- 2021년 : 공사완료(4개소), 공사추진(6개소)
 - 공사완료 : 창리 제1, 신문 제1, 갑곶 제1, 갑곶 제2
 - 공사착공 : 창리 제2(2차)
 - 사업추진중 : 양사 교산리, 고려산(백련사),
- 2022년 : 추진예정(5개소)
 - 공사추진예정 : 신문 제2, 신문 제3, 내가면 외포리, 강화읍 관청리, 내리 선수항
- 2021. 5월 :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신청(석포리 → 신문리)
- 2021. 8월 : 22년도 인천시 보조사업 신청(5개소)
- 2021. 9월 : 사업대상지 변경승인(국토교통부)

☐ 기대효과

- 불법 주정차 해소는 물론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상업지역 내 상권 활성화

수범사례 8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 추진배경

- 농어촌 지역 특성상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장소가 도로변 등 노상에 위치하고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 마을환경을 저해
-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이행으로 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근절로 청정 강화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비 : 3,352,443천원(국:75,000천원, 시:509,943천원, 군:2,767,500천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분리배출시설 200개소 설치

□ 주요성과 및 실적

- 2020. 12. :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사업 실시
 - 강화군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강화읍 10개소 설치
- 2021. 1. : 재활용 동네마당 확대 설치 추진
 - 분리배출시설 88개소 설치완료, 122개소 설치 중
- 2022. 1. : 재활용 동네마당 200개소 설치 계획

□ 기대효과

- 올바른 분리배출 이행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 혼합되어 배출되던 생활쓰레기가 올바르게 분리 배출되면서 재활용 비율이 향상되고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및 재활용품 매각수입 증대
- 마을환경개선으로 깨끗한 강화 이미지 제고
 - 마을 곳곳에 산재하던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를 정비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 관련사진



생활쓰레기 배출취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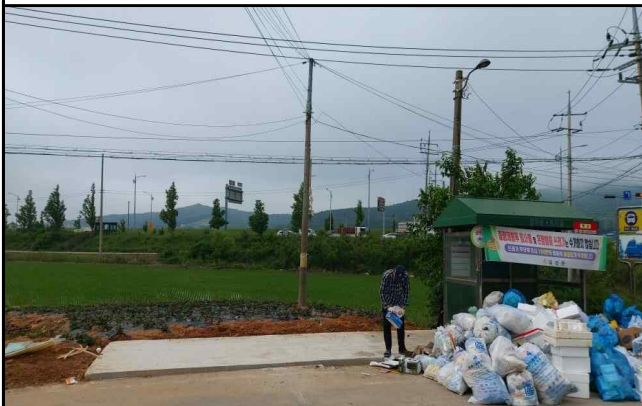
동네마당 설치 후



생활쓰레기 배출취약지



동네마당 설치 후



생활쓰레기 배출취약지



동네마당 설치 후

수범사례 9

효율적인 토사은행 운영으로 예산절감

☐ 추진배경

- 외부(김포지역)로부터 반입되는 순성토재를 반입최소화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공사업에 적극지원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적극 유도

☐ 토사은행 운영 현황(2020년~2021년)

- 위 치 : 선원면 연리 14-13 일원
- 면 적 : 약 11,200㎡(약 3,394평)
- 사용목적 : 공공 발생 토사 수집 · 보관

구 분	토 사(㎥)	토 석(㎥)	계	비 고
반입량	27,984	27,011	54,995	
반출량	6,810		6,810	
보관량	21,174	27,011	48,185	

☐ 토사은행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액(추정)

구분	운반거리 (km)	수량 (㎥)	단가 (원)	비용 (백만원) 제경비포함	비고
외부토사반입 (김포)	29.2	48,185	16,901	1,140	
토사은행 (선원면 연리)	7.8	48,185	5,657	381	※758백만원 절감

☐ 기대효과

- 순성토 운반거리 단축에 따른 예산절감
- 적기 토사(토석) 지원으로 작업효율 극대화

□ 추진배경

- 마을안길은 1960~70년대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무보상을 원칙으로 도로 확·포장을 실시하여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현재 많은 지역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 갈등 해소와 마을 내 기반시설(도로) 확충을 위하여 강화군은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에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60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마을안길 편입 토지에 대한 연차별 보상 실시

□ 주요성과 및 실적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 상 비	260억원	40억원	50억원	70억원	100억
매입필지	-	213필지	296필지	323필지	접수중

※ 2021년 9월 현재 추진실적

□ 기대효과

- 마을안길로 인한 각종 분쟁 및 지역갈등 해소
- 사유지이나 마을안길로 사용 중인 도로를 보상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 마을 내 안정적인 기반시설(마을안길) 확보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 추진배경

- 강화군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도심에서 자연으로의 최단시간 탈출”, “도시공원 없는 곳은 있어도 하나만 있는 곳은 없다”를 슬로건으로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441-1번지 일원
- 규 모 : 조성면적 11,554m²
- 총사업비 : 7,800백만원(군비 100%)
- 주요시설 : 휴게시설, 인공폭포, 운동시설, 문화광장, 화장실 등

□ 주요성과 및 실적

- 갑룡공원 조성 전 주민 의견은 강화는 사방이 산과 들로 문만 열면 그 자체가 자연공원이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강화군 최초의 도시공원을 접해 본 주민들은 “우리 집 앞에도 공원을 만들어 달라”, “갑룡공원 규모와 면적을 더 확장해야 한다” 등 인식이 전환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남산공원, 관청공원, 북산공원)또한 갑룡공원 조성 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함
- “군비 100%”로 군자체공원(갑룡공원 2단계, 길상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계기가 됨
- 공원조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의 복리 증진으로 사회비용 감소
- 조성계획 수립부터 보상, 인허가, 준공까지 최단시간 소요된 성과를 이룸

<갑룡공원 1단계>

- 2018. 9. : 갑룡공원 조성계획 수립
- 2018. 11. : 갑룡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3. : 토지매입(10필지, 12,154㎡)
- 2019. 9. : 공사 착공
- 2020. 9. : 공사 준공(2020.9.4.)
- 2020. 9. : 준공식(2020.9.28.) 및 개장

<갑룡공원 2단계>*

* 총사업비 5,800백만원(군비100%) | 규모 7,051㎡ | 주요시설 자연카페, 모험놀이터 등

- 2020. 6. : 갑룡공원 확대 계획(갑룡공원 2단계 방침) 수립
- 2020.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4.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7.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21. 8. :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관련사진



갑룡공원 전경



갑룡공원 조성지 및 확대 조성예정지